

호남발전특위, ‘지방정부 재정강화법’ 당론 채택 요구

광주 26개·전남 35개 총 110개 발전과제

단순나열 넘어 재정구조 근본개혁안 제시

지방교부세율 19.24%→27%로 상향 요구

인구소멸지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건의

정청래 “호남 희생 표나게 실천으로 보답”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실에서 있었던 호남발전특별위원회의 보고서가 단순한 ‘사업 리스트’ 나열에 그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근본적인 재정 구조 개혁안을 제시, ‘돈 없는 지방자치’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3일 국회 등에 따르면 호남발전특위는 광주 26개, 전남 35개를 포함해 총 110개 호남 발전 과제

를 정 대표에게 공식 전달했다.

전달된 호남 발전 과제는 ▲광주 AI영재고 설립 ▲미래모빌리티 인지부품 기능안전 시험 지원 ▲KTX 호남선 공정 운행 (증편) ▲국립의대 신설 ▲여수 산단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클러스터 ▲광주-나주 광역철도와 광주 신산업선 등 지역민의 여망이 총망라됐다.

특히 특위는 비수도권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 재정강화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을 정 대표에게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7%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이는 지난 20년간 동결됐던 비율을 깨는 것으로 실현될 경우 지방정부로 이전되는 재원이 수십조원 증가하게 된다.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세율을 22

~24% 수준으로만 올려도 최대 16조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27% 인상은 지방 재정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수준이다.

또 현재 국세(부가가치세)의 일부를 떼어 지방에 주는 지방소비세 배분 비율을 중앙 대 지방 75 대 25에서 55 대 45로 조정해 지방정부가 징수된 세금의 절반 가까이를 직접 가져갈 수 있도록 설계한 것도 눈길을 끈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의 전면 수술도 건의됐다. 경제성(B/C) 분석 위주의 현행 예비타당성조사는 인구가 적은 호남 지역 대형 사업의 무답이 돼왔다. 이에 특위는 2개의 획기적인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첫째, 기존 금액 상향이다.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에서 1천500억원(국비 900억원)으로 3배 상향 조정해 중소기업 사업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문턱

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비수도권 및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예타 면제다. 국가 균형 발전이 시급한 비수도권 지역이나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의 사업에 대해서는 아예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국가재정법 개정 등)를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경제 논리가 아닌 ‘생존 논리’로 지역 사업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호소다.

이날 정청래 대표는 “호남의 송고한 희생에 ‘표나게’ 실천으로 보답하겠다”며 “이번에 건의된 과제들이 정부 예산과 정책에 반영되도록 챙기겠다”고 화답했다.

당 지도부 내에서는 최근 기후에너지부 호남유치가 무산되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호남 홀대론’이나 ‘공약 파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이번 예산 국회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

는 이를 “지지층 결집을 위한 매표용 현금 살포이 자재정 폭주”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지방교부세율 27% 인상안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재정 건전성 우려와 맞물려 “국가 재정을 판단할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했다.

그러나 이병훈 호남발전특위 수석상임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그동안 호남발전특위 광주위원회는 내부 회의 7회, 정책간담회 8회, 전문가 특강 15회, 시민 의견 수렴 행사 1회 등을 거쳤다”며 “이재명 정부 내에서 예산, 정책, 법안으로 반드시 구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가칭 ‘지방정부 재정강화법’의 성패는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활용해 관련 법안들을 얼마나 정교하게 통과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반대 여론을 설득하고 실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전망했다.

/김전수 기자



李대통령, G20 정상회의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나스렉 엑스포센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대표에 다시 조국... 98.6% 찬성

“오직 국민의 뜻 따라 신행로 개척”

최고위원 신장식·정춘생 의원 당선

조국혁신당은 23일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새 대표로 선출했다.

조 신임 대표는 이날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2025 전국당원대회’에서 찬반 투표를 통해 98.6%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당선됐다.

조 대표는 정경 발표에서 “(윤석열 정권 시

절) 쇄빙선이 돼 정권 심판의 불을 지피고 민주진보 진영의 압승을 이끌어 국회 제3당을 만들 어낸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며 “가이코 윤석열 검찰 독재를 무너뜨리고 내란을 격퇴한 당원동지가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당은 한국 정치가 의지해온 낡은 해도(海圖)를 찢겠다”며 “오직 국민의 뜻을 나침반 삼아 거대 양당이 가지 않은 신행로를 개척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 민생개혁, 경제개혁, 사

회개혁, 인권개혁의 항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이재명 정부 첫 광복절에 특별 사면·복권됐다. 이후 당내 성 비위 사건이 불거지자 혼란을 수습할 비대위원장을 맡 았다가, 이번 전대에 당 대표 후보로 단독 출마 했다.

이날 2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 선거에는 신장식, 정춘생 의원이 각각 당선됐다.

차기 지도부는 조 대표와 서왕진 원내대표, 신장식·정춘생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위원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대폭 교체 수순 밟나

대選 출마 최고위원 3-6명 사퇴 전망

당헌상 출마자 사퇴 시한은 내달 5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잇따라 사퇴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청래 대표 지도부의 대폭 교체가 예상되고 있다.

당내에서는 전체 9명 최고위원 가운데 과반(5명 이상)이 사퇴할 경우 비대위 체제로 전환될 수도 있는 데다, 비대위로 가지는 않더라도 후임 최고위원 성향 등에 따라 지도부 성격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지방선거 출마자는 선거 6개월 전인 12월5일까지 최고위원직을 사퇴해야 하는데, 정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제외한 최고위원 7명 중 최소 3명, 최대 6명이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가장 먼저 몸을 푸는 것은 김병주·한준호 최고위원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번 주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고 경기지사 출마 선언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최고위원도 경기지사 출마를 위해 이번 주 사퇴를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장 도전을 준비 중인 전현희 최고위원 역시 사퇴 시점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당 안팎에서는 이언주 최고위원(경기지사), 서삼석 최고위원(전남지사), 황명

선 최고위원(충남지사)의 지방선거 도전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 최고위원들의 출사퇴가 예고되면서 민주당 지도부도 내년 초에 재편될 전망이다.

만약 최고위원 과반이 꺾이될 경우 당은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비상대책 위원회를 꾸리게 된다. 최고위원회는 즉각 해산되며,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대표의 권한을 행사한다.

다만 당내에서는 비대위 가능성은 매우 낮게 보고 있다.

실제 출마 가능성이 제기된 한 최고위원은 “나까지 나가게 되면 과반이 무너진다”라면서 사퇴 문제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당 핵심 관계자도 “비대위로 가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며 “최고위원이라는 중요한 당직을 개인의 정치 일정에 활용해선 안 된다는 생각들은 최고위원들도 당연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위원의 연쇄 사퇴가 비대위 구성으로 연결되지 않을 경우 보궐선거로 후임을 구성하게 된다.

당헌·당규상으로는 잔여 임기가 8개월이 미만일 때는 중앙위에서, 그 이상일 때는 중앙위원(50%)과 권리당원(50%)이 참여하는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당 일각에서는 최고위원들의 출사퇴에 따른 지도부 일부 공백이 이른바 ‘사법개혁’ 추진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합뉴스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심의번호
220603-중-139779

